

“방통위 파견 검·경 수사관 원대복귀해야”

민주 정동영 의원 “특별수사본부로 둔갑시킨 것은 헌법 위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교육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회 종합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 중인 검찰·경찰 수사관을 원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찬성 13인, 반대 7인으로 위원회에 상정됐다.



정동영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특별수사본부’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라며 “국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사전기관화를 경고하고 지적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과방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방통위에 현재 파견 중인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경찰의 강력팀장, 검찰의 형사과 수사관들이 와서 회계검사를 돕고 직무검사를 돕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2023년 6월자로

방통위 감사담당관실에 외부 파견 인원이 폭증했다”고 꼬집었다. 감현 의원은 이어 “이런 인원을 원대 복직시키고 실제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에 필요한 인력들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그 밖에 감사원, 또 감사관이 파견기간 연장의 연장을 넘어서 1년이 지났지만 인사혁신처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파견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야 한다. 정동영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답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감사원에도 예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혁신처와) 협의 없었더라는 것이 문서로 답변이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며 “검정 수사관들을 즉각 돌려보낼 것을 위원회의 뜻으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제안드립니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

축산 자조금 수급조절 역량 강화 절실

민주 이원택 의원, “자조금 사업역량 강화 제도개선 힘쓸 것”

2004년 한돈자조금을 시작으로 도입된 지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농산 및 축산 자조금이 소비·홍보 기능을 넘어 수급조절 역량을 갖추어 수급조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원택 의원은 “자조금이 원활히 확보되어야 기존의 소비·홍보 사업 중심에서 수급안정 및 품목 경쟁력 사업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서,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수급조절의 필요성의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비롯한 자조금의 사업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0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82.5억원으로 1개 단체 당 평균 4억 수준에 불과해 수급조절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2023년 축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97억9,4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용은 수급안정 41.6%, 소비홍보 27.8%, 교육 및 정보제공 11.1%, 유통구조 8.8%, 운영비 등 기타 8.8%, 조사

연구 2% 순으로 나타났다. 9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40억1,400만원으로 1개 단체 당 평균 45억원에 불과하다. 한우자조금의 경우 실제로는 329억원을 수급안정사업에 사용했지만 13조원이 넘는 한우산업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양봉, 사슴 등의 축산 단체와 콩나물, 차, 블루베리, 밤, 키위 등 농산 단체의 경우 자조금의 규모가 작아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조금 단체에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먼저, 모든 품목 농가가 자조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블루베리, 밤, 버섯, 양봉과 같이 수급관리 필요성이 높은 품목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자조금 지원 예산을 늘려 현재 69%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자조금-정부 일대일 매칭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자조금이 원활히 확보되어야 기존의 소비·홍보 사업 중심에서 수급안정 및 품목 경쟁력 사업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서,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수급조절의 필요성의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비롯한 자조금의 사업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농협 채권·정부양곡 정산 법제화

민주 윤준병 의원, 국감 후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 24일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서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에 채권 발행 및 채무부담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가격과 매입규모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채권의 발행 및 종류·채권의 이자율·채무부담 금액·원리금 상환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제 도입 정책자료집 발간

민주 한병도 의원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농어업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요건으로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자조금이 원활히 확보되어야 기존의 소비·홍보 사업 중심에서 수급안정 및 품목 경쟁력 사업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서,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수급조절의 필요성의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비롯한 자조금의 사업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다. 이번 자료집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현재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재해대책’과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농어업재해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특히 농어업재해대책은 △생계지원 △재난복구 지원 △간접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대책에 따른 국제·지방세 감면 등 18개 항목 지원,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등 30개 항목의 지원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

한병도 의원이 새롭게 제안하는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이상저온, 우박, 서리 등 농어업 특정 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자료집이 농어업 분야의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정음=김대환 기자



지난 25일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열린 제44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로운 출발·희망찬 미래”

제44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식

도민현장 낭독·전북인대상 시상식 등 진행... 자부심 고취 김관영 도지사 “도전·성공하는 특별한 지역 이뤄나갈 것”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한국소리문화전당 모악당에서 제44주년 도민의 날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이번 기념식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도민들에게 새로운 출발과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출향 도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전북도의 성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민의 날은 1981년 조례로 제정

된 이후 매년 10월 25일, 벚가 무르익는 수확철에 맞춰 도민의 단합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돼 왔다.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첫해를 맞아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해졌으며, 도민현장 낭독,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시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했다.

특히, 도민현장은 전주고등학교 야구부 주전선수로 활약하며 청룡기와 병행대기에서 우승을 이끈 송관우 학생과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강은미

대표가 함께 낭독했다. 이들은 전북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혁신, 경제, 문화, 나눔 분야에서 전북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이 수여됐다.

수상자로는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 아카데미 한상섭 원장, 김중합건축사(주) 이길환 대표이사, 동남풍조상훈 대표, 지영업자 김남수씨가 선정됐다.

아울러, 이번 도민의 날 행사에는 출향 도민들도 초청해 고향의 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념사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공하는 특별한 지역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여정에 도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尹, 노동정책 현실 기반으로 전환해야”

안호영 국회 한노위원장, “노동시장 불안정해에도 일부 경제지표 확대 해석”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주·진안·무주군)은 25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4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지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자화자찬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현실 기반으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률은 역대 최고이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동폭이 역대 최대로 노동시장이 매우 불안정

함에도 아전인수격으로 ‘지표 착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8월 기준 전체 취업자의 54.6%가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의 단기근로

자고,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 23.6%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뚜렷한 이유 없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구직단념자(쉬었음) 인구 역시 8월 기준 256만 7천 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최

대임에도 일시적인 수치로 경제가 살

아했다고 오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단기근로자가 절반 이상이고,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에도 경제지표를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해 어려운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단기근로자 증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든 경제 상황이 만든 결과임에도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원인 파악을 잘못해 부적절한 처방을 하고 있다”고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축전주매일 창간
고창부안축협 임우명품관
축산인의 실익도모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고창부안축협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한우명품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신길 13
예약문의 : 063-563-6001
부안한우명품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85-1
예약문의 : 063-581-2349